

문화방송 노보

발행일 : 2023. 2. 6

271호
www.mbcuni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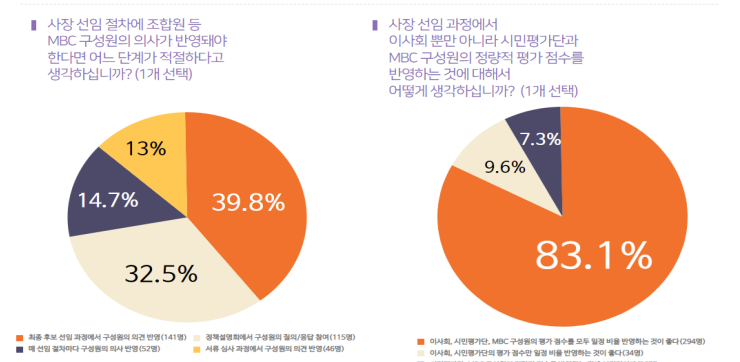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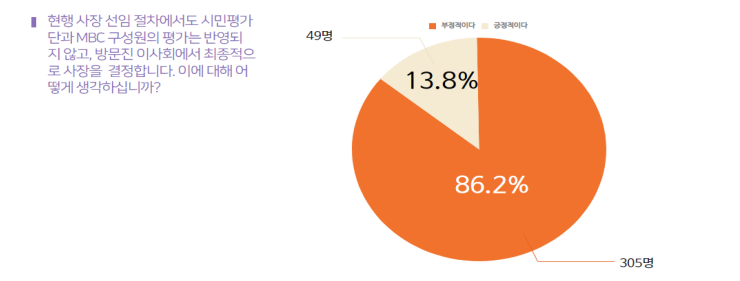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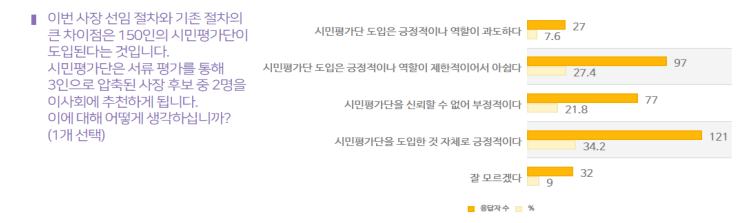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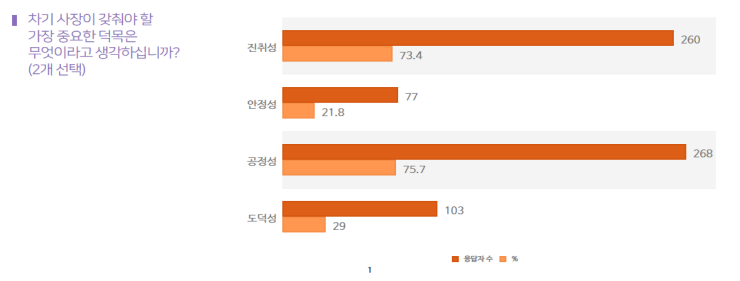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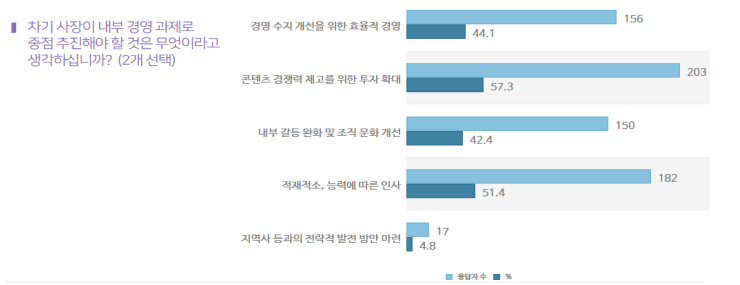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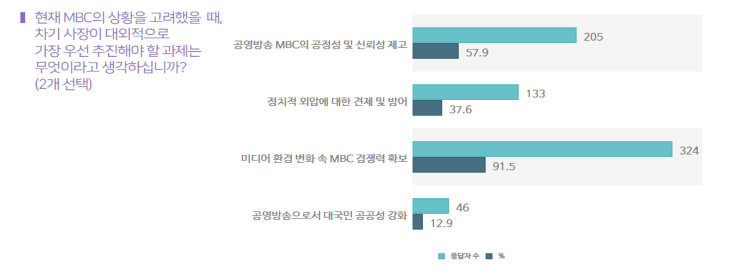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강연섭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전화번호 02-789-3881~6 FAX 02-782-0135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조합원 참견 시점'

우리는 이런
공영방송 사장을
원한다



노사관계 훼손 NO
제작자율성 훼손 NO
MBC 경쟁력 확보
우려스런 외부 공세

구성원 의견 반영해야
진취성
경영 능력
콘텐츠 투자 확대
정치적 외압에 방어
적재적소 인사
시민평가 도입은 긍정적
소통 의지와 실행 능력

공정성

구성원이 원하는
MBC 차기 사장은?

“MBC 국민의 품으로” 이제 시작됐다

향후 3년 공영방송 MBC를 이끌 사장 후보자 등록이 지난 2일 마무리됐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선보이는 MBC 차기 사장 후보 3인의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은 그동안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故 이용마** 기자의 유지에 따라 공영방송 독립의 핵심이 사장 선임 절차에 있다고 보고 ‘국민 참여 보장’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리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국민 참여’를 본격화한 이번 MBC 사장 선임 방식이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날 언론을 장악하고자 했던 적폐 정권과 그에 부응했던 과거 사장들이 어떻게 공영방송 MBC를 망가뜨렸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의 부역으로 국민의 공공재인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했던 노골적인 통제로 공영방송 MBC는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민주주의 진전을 위한 사회적 공기가 아닌 사회적 흉기로 추락했다. 과거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를 까였다”라는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충격적인 고백은 적폐 정권과 방문진 그리고 낙하산 사장의 폐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조합은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핵심이 정파적 틀을 넘어서는 사장 선임 구조에 있다고 보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방식인 ‘시민평가단 시행’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다.

조합은 그런 점에서 방문진이 이번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 열릴 후보자 정책발표회, 시민평가단 속의 과정, 그리고 21일 최종 후보자에 대한 방문진 면접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키로 한 데 대해 의미 있게 평가한다. 다만, 지난 2일 후보자 등록 마감과 함께 일부 후보자가 정치 권력에 선을 대고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조합은 성명을 통해 강력히 경고했다. 조합은 외부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위중한 작금의 현실에서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앞장서야 할 차기 사장 자리를 정치 권력의 힘을 빌려 차지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자 구태임을 분명히 밝힌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 온전한 시민평가

아울러 방문진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뒷배를 이용하는 후보자들을 철저히 걸러내라. 법적 권한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오로지 국민과 시청자들의 뜻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야 한다.

따라서 처음 실행되는 제도인 만큼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다. ‘시민평가단’은 차기 MBC 사장 선임 절차의 한 단계를 맡게 된다. 시민평가단은 방문진의 1차 심사를 통해 추려진 후보 3명의 정책설명회를 듣고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평가단’이 선임 절차의 한 단계를 독립적으로 온전히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KBS가 최종 선정에 시민평가단의 평가를 40% 반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역할의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사장 선임 절차의 시작과 최종 결정은 방문진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자칫 시민의 참여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걱정과 최악의 후보를 배제하는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조합이 최근 벌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평가단 도입은 긍정적(34.2%)이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아쉽다는 의견(27.4%)이 많았다. 따라서 방문진은 향후 2주간 ‘시민평가단’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숙의 시간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KBS 사장 후보자 비전발표회 :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2021.10.23)

독립적, 공정한, 투명한 심사 반드시 지켜져야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배제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선임 절차를 시청자와 종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는 출발점이다.

방문진 이사들이 바라보아야 할 곳은 정부도, 여야 정당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사장을 뽑아야 한다. 이것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부여된 의무이다.

이번 사장 선임 절차에 도입되는 시민 평가제는 MBC에서는 처음 실행된다. 3년 전 120명의 시민평가단 구성까지 마쳤지만, 정책설명회 직전 코로나19로 아쉽게 무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민 앞에 선보이는 예비후보 3인을 선정하는 과정도 방문진이 스스로 천명한 기준(△ 공영방송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수호 △ MBC의 경쟁력 강화 △ 조직의 화합과 혁신 △ 관계자의 혁신과 발전)에 걸맞은 후보자를 엄선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 앞에 선보이는 3인의 후보는 바로 방문진이 1차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결과이기에, 그 결과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당부한다.

(3면에 계속)

공정방송 실현 주체인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라

더 나아가 방문진 이사회는 시민들은 물론 MBC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사장 후보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조합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내부 구성원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현 사장 선임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지난 연말 대법원은 2012년 MBC 170일 파업에 합법임을 밝히면서 “공정방송의 의무가 방송 사업자뿐 아니라 방송 종사자들에게도 부여된 의무임”을 명확히 했다. 노사 관계와 제작 자율성 보장이 공정방송의 중요한 요소라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방송 현업 종사자들은 경영진과 더불어 공정방송을 실현할 중요한 주체이자, 차기 사장이 공영방송의 가치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민의 신뢰는 물론, 현업 종사자들과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방문진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난 2020년 사장 선임 과정에 실시했던 ‘종사자 공개 질의’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조합은 깊은 유감과 함께 향후 진행될 시민평가단의 정책토론회, 최종 면접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 및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장 후보 3인에게 '공개 질의'

조합은 최근 노보를 통해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함과 동시에 공영방송 MBC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체인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이번 사장 선임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사장 공모에 맞춰 나흘간에 걸쳐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했고, 나흘간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합원이 설문 조사에 응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조합은 이번 노보에서 설문 조사 결과를 자세히 공개함(4, 5면)과 동시에 설문 조사를 통해 취합한 의견과 질문, 사내 8개 직능협회를 통해 취합한 질문을 바탕으로 시민평가단에 평가를 받는 후보자 3인에게 공개 질의를 하려 한다. 공개 질의 내용은 향후 노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방문진에도 전달해 오는 21일 사장 후보자 최종 면접에서 구성원들을 대리해 방문진 이사회가 질문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정 말살' 적폐의 후안무치...역사는 기억하고 있다

MBC 신임 사장 공모에 전·현직 13명이 지원한 가운데, 조합은 방문진이 내세운 선임기준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드러난 일부 후보의 지난날 행적을 공개하려 한다. 그동안 조합은 우리 스스로 자성과 반성을 통해 공영방송 MBC가 다시 퇴행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날을 모두 기록화했고, 이 모든 기억이 흘러간 과거가 되어 묻히고 잊혀 버려서는 안 된다고 본다. 더욱이 지난날 MBC를 망가뜨리는 데 앞장서고 저널리즘을 압살했던 인물들이 MBC 사장이 되겠다고 뻔뻔하게 이름을 올린 모습에 조합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다.

■ 문호철 전 보도국장은 지난날 적폐 경영진인 김장겸과 함께 MBC를 극우 세력의 대변인이자 기관지로, 공공재인 뉴스를 적폐 경영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며 MBC를 파괴한 주범으로 지목받아 온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2012년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 아래서 정치 뉴스 데스크를 담당하며 편파보도에 일조했고, 편파보도의 공을 인정받아 이후 편집1부장, 워싱턴 특파원으로 승진했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던 지난 2014년 4월에는 전 국민이 세월호 참사에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던 와중에 외유성 출장을 떠난 방문진 이사진들에게 110만 원 상당의 만찬과 현금 골프 접대를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으로 승승장구하며 그는 박근혜 정부·여당 편향 보도를 주도했다. 그가 보도국장으로 있던 2017년 19대 대선 보도는 총체적 부실과 노골적 편향으로 최악의 대선 보도로 선정되기도 했다. 근거가 불분명한 가짜 뉴스를 그대로 보도하며 특정 후보 낙선을 위해 뛰는 극우 세력의 대변인이자 기관지로 MBC 선거 보도의 몰락을 가져왔다. 바닥으로 추락한 시청률과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역 불거리떡거리' 코너를 신설해 MBC 뉴스의 경쟁력은 먹방에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조간 제목을 그대로 따온 악의적인 청부 제작 지시가 만연했고, 급기야 권력과 유착한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유출 보도'로 정점을 찍었다.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박근혜 호위무사'로 불리던 우병우를 지키기 위한 공작 보도 정황이 드러났지만, 그는 책임 대신 각종 조사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그가 지난날 보여준 저널리즘은 “사실에는 눈을 감고, 진실에는 입을 닫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의 저널리즘은 압살 됐다.



■ 조창호 전 시사제작국장 역시 문 전 국장과 함께 지난 시절 MBC 몰락 과정에서 저널리즘 말살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그는 적폐 경영진이었던 안광한 전 사장 밑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표적 징계·부당 전보 등 노조 파괴와 카메라 기자·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했으며 김장겸 체제하에서는 시사제작국장으로 승진하며 탐사 저널리즘을 말살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국장의 월권으로 취재조차 불허하며 <PD수첩> 제작진들이 제작 거부에 돌입하게 만든 당사자였다. 그가 시사제작국장으로 있는 동안 세월호 관련 보도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는 불허됐고, 정권에 불리한 아이템 제작은 취재조차 거부됐다.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뷰 내용은 술하게 난도질했고, 국정원을 '정부 기관'으로 쓰라고 지시하는 등의 검열도 일상화됐었다. 부당 지시에 저항하는 구성원들을 징계하고, 억지 논리와 궤변으로 우기다가 변명조차 막히자 제작진을 징계하는 비열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렇게 한때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던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은 결국 사회적 흥기로 전락했다.

조합원 참견 시점

- '우리가 원하는 사장은?'

조합은 차기 사장의 적합성과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나흘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MBC 본부 서울지부 조합원 1,077명에게 네이버벅스를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고, 이 중 354명이 응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모든 설문 내용 및 결과는 조합 홈페이지(www.mbcunoin.or.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 공영방송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비전
- ☑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의지와 역량
- ☑ MBC의 경쟁력을 강화할 의지와 역량
- ☑ 조직의 화합과 혁신에 대한 의지와 역량
- ☑ 관계사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 의지와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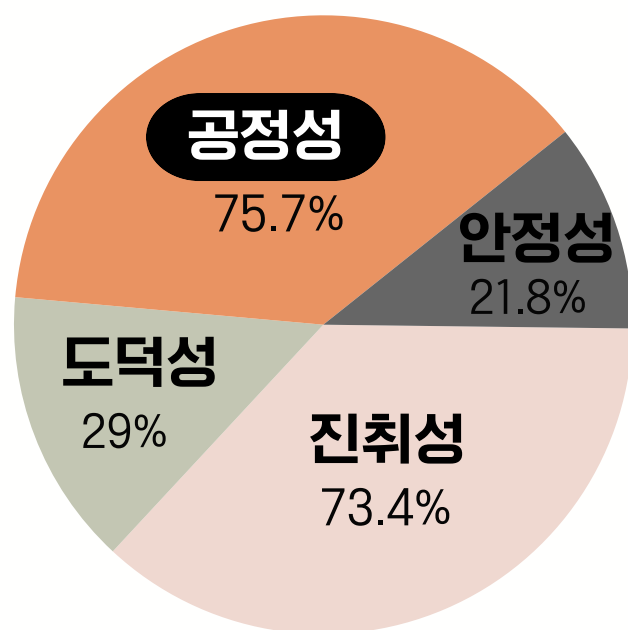
조사기간 : 2023. 1.30 13:30 ~ 2023. 2. 2 17:00
 응답 방식 : 자질, 덕목 등 적합도 설문 - 복수 응답
 사장 선임 절차 및 방식 - 단수 응답
 응답율 : 33% (서울지부 354명 / 1,077명)

사장의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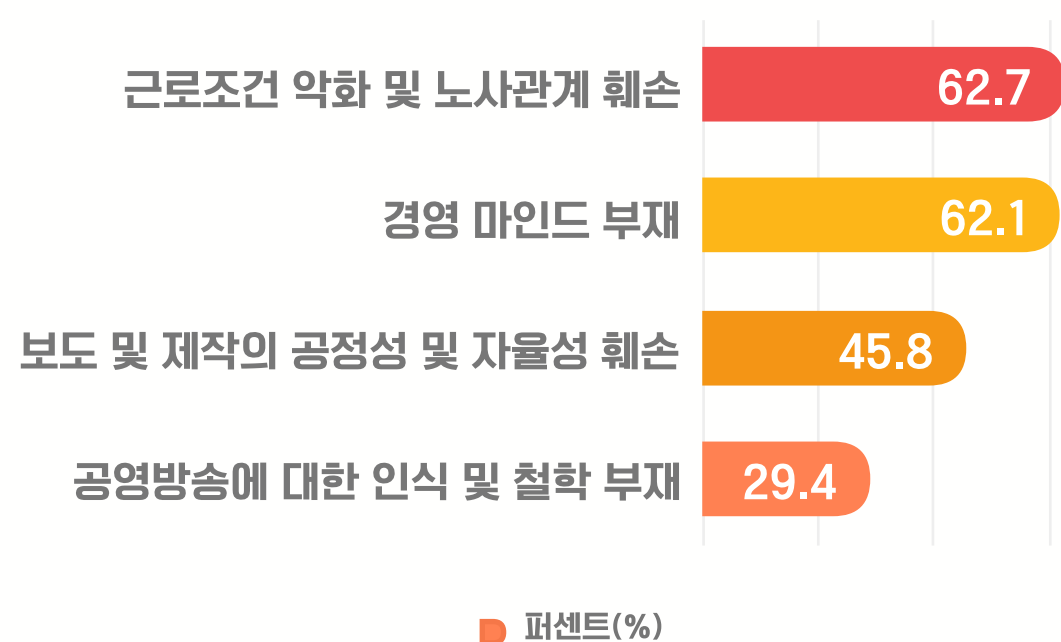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차기 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정성'으로 나타났다. 차기 사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2가지를 선택해 달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5.7%인 268명이 공정성을 꼽았다. 공영방송 MBC 사장이라면 공정방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공정성'은 보도, 제작에서의 공정뿐 아니라 적재적소 인사 원칙 등 경영 전반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가치인 만큼, 차기 사장이 MBC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하는 것을 조합원이 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진취성'을 차기 사장이 갖춰야 할 중요 덕목으로 꼽은 응답자도 260명(73.4%)에 달했다. 선택지 중 '안정성'을 꼽은 응답자가 77명(21.8%)인 것과 비교하면, 차기 사장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더욱 진취적인 자세로 돌파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차기 사장이 '이런 점만은 안 된다'라고 꼽은 결격 요소로는 '근로조건 악화 및 노사관계 훼손'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전체 응답자 중 62.7%인 222명이 이를 꼽았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경영진이 자행했던 단체협약 폐기, 부당해고와 부당전보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결격 요소로 '경영 마인드 부재'를 꼽은 응답자가 62.1%였으며, '보도 및 제작의 공정성 및 자율성 훼손'과 '공영방송에 대한 인식 및 철학 부재'도 각각 45.8%, 29.4%로 적지 않은 선택을 받았다.

Q. 차기 사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복수 응답)



Q. 차기 사장의 핵심 결격 요소?(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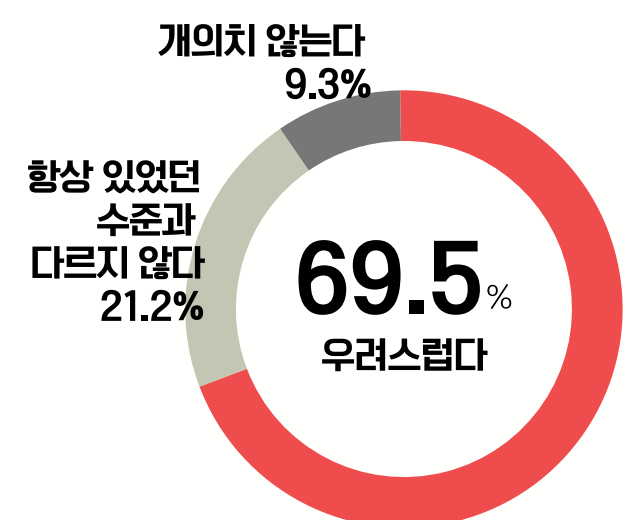


외부 공세 '우려스럽다'

MBC를 둘러싼 외부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외부의 공세 수준이 우려스럽다'는 선택지를 고른 응답자는 24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9.5%에 달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발생한 비속어·욕설 파문과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 등을 거치면서, 정권과 집권 여당, 그리고 감사원, 총리실, 국세청 등 온갖 국가 기관 등이 총동원돼 자행하고 있는 MBC 탄압에 대해 조합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사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팽팽했다. 응답자 중 46.9%(166명)가 '외압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보도와 제작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외압의 부당성과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는 응답(157명, 44.4%)과 거의 비슷한 수치다.

내부적으로는 보도, 제작을 신중히 기하되, 부당한 탄압에 대해선 강하게 나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외부의 공세에 '일절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자는 8.7%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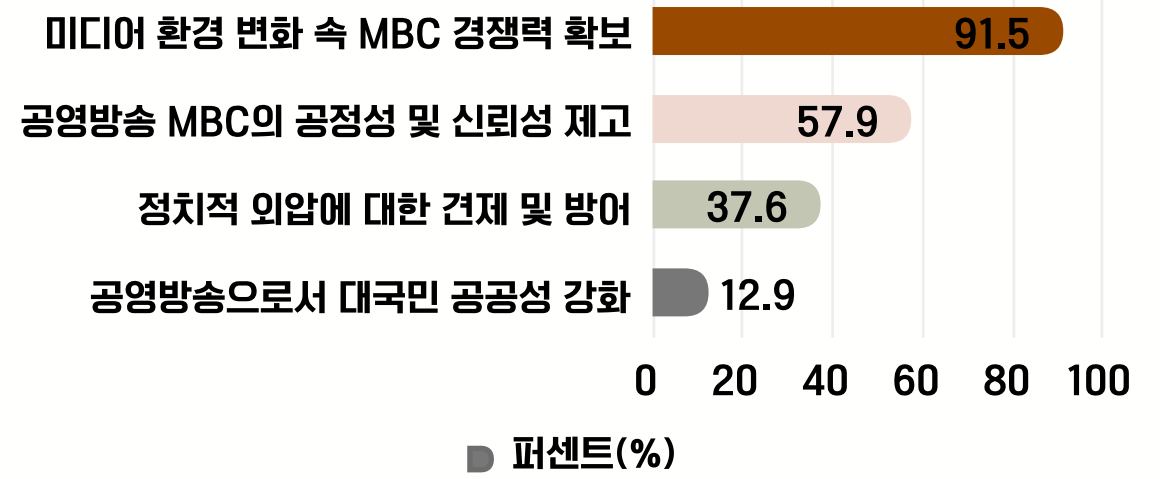
Q. 현재 공영방송 MBC를 둘러싼 외부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우선 과제는 '경쟁력 제고'

차기 사장이 대외적으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2개를 묻는 질문에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 MBC 경쟁력 확보'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91.5%인 324명이 선택했다. 뒤를 이어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57.9%(205명), '정치적 외압에 대한 견제 및 방어' 37.6%(133명)로 나타났다. 중점 추진할 내부 경영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가 203명(57.3%)으로 가장 많았다. '적재적소, 능력에 따른 인사'(51.4%), '경영 수지 개선'(44.1%), '내부 갈등 완화'(42.4%)도 적지 않은 선택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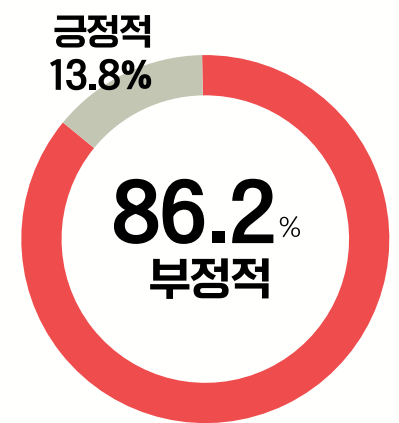
Q. 현재 MBC의 상황을 고려할 때, 차기 사장이 대외적으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 응답)



MBC 구성원 목소리를 들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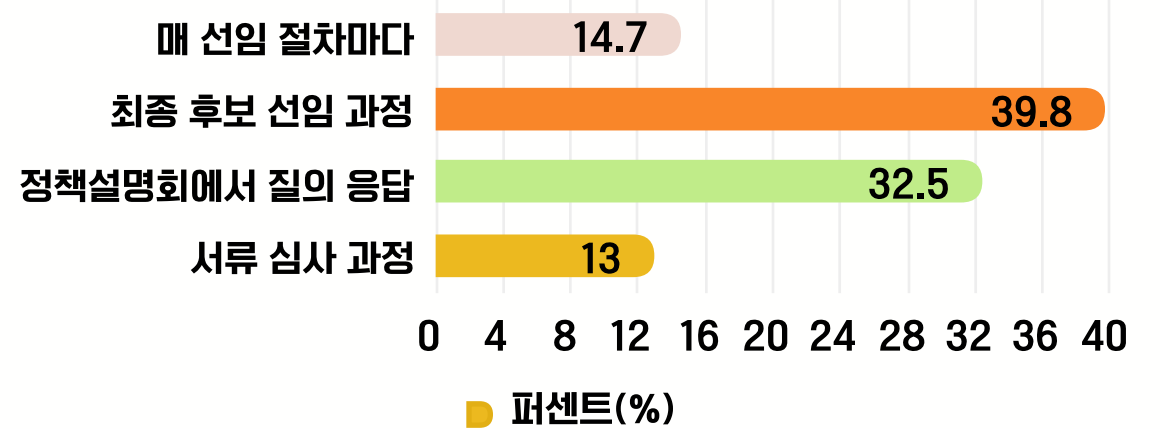
사장 선임 절차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문 결과, 조합원들도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 중 86.2%인 305명이 내부 구성원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 현 선임 절차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사장 후보자의 면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고, 보다 전문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가 가능한 내부 구성원의 참여가 시민평가 단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또한 공정방송을 실현할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시민평가단·구성원 평가 반영 없고, 방문진 이사회에서 사장을 최종 결정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은 또한 내부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할 절차로는 '최종 결정 단계'를 꼽은 응답(141명/39.8%)이 가장 많았다. '정책발표회에서 구성원의 질의/응답 참여'를 꼽은 응답자 115명(32.5%)으로 그다음을 차지했고, 모든 선임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14.7%였다. 적어도 최종 선임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든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MBC 사장 선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법률에도, 방문진 정관에도 사장 선임 절차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오로지 방문진 이사회가 선임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방문진 이사회가 결정만 하면 이번에 시민평가단을 도입한 것처럼 얼마든지 내부 구성원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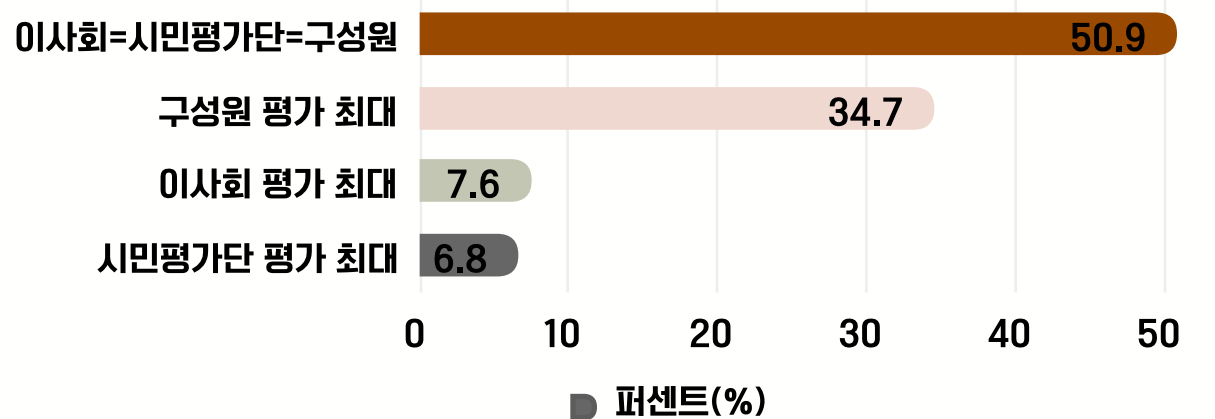
Q. MBC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할 절차는?



조합원들은 사장 선임 절차상 이사회와 시민평가단 그리고 내부 구성원의 정량적 평가 점수가 일정 비율로 반영되는 것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3.1%인 294명이 이런 방식이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더 구체적으로 평가 점수 비율을 묻는 질문에 180명(50.9%)이 '방문진 이사회, 시민평가단, MBC 구성원의 평가 점수 동일 비율 반영'을 선택했다. 구성원의 평가 점수를 가장 높은 비율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34.7%(123명)였다. 결국 사장 선임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현 절차에 대한 불만을 넘어 최소한 동일 비율 이상으로 구성원의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조합원들의 생각이다.

Q. 이사회, 시민평가단, MBC 구성원의 평가 점수 적정 비율?



시민평가단 도입은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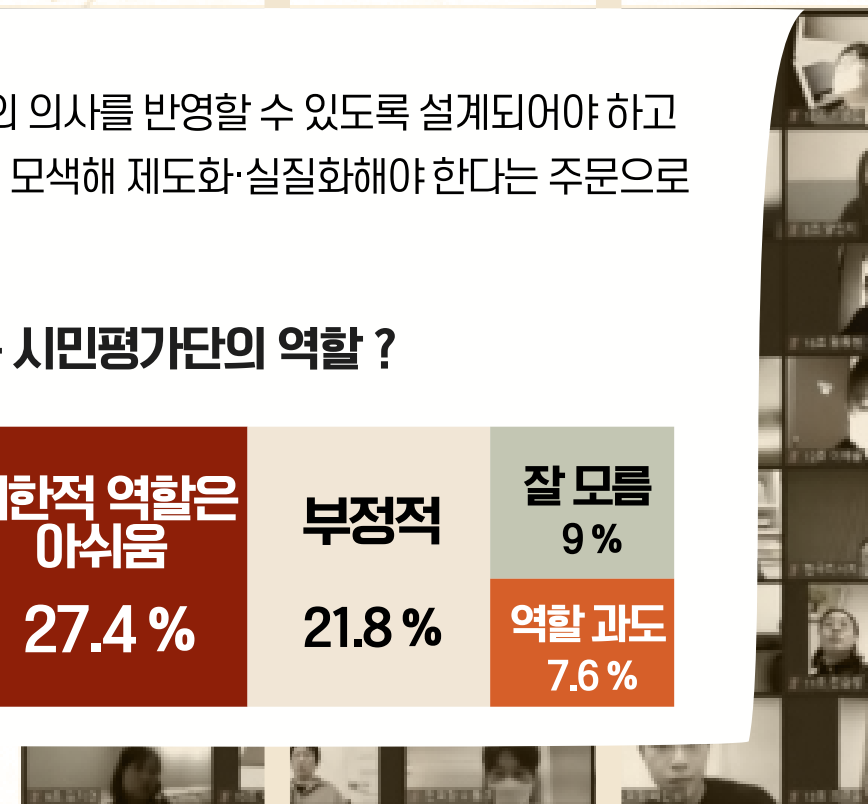
사장 선임 절차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이번에 도입한 시민평가단에 대한 조합원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다. 150인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은 오는 2월 18일로 예정된 사장 후보자 3명의 정책발표회를 듣고, 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방문진 이사회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설문 결과, '시민평가단 도입 자체로 긍정적'이란 답변이 121명(34.2%)으로 가장 많았고, '시민평가단 도입은 긍정적이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아쉽다'라는 응답이 97명(27.4%)으로 뒤를 이었다. '시민평가단 도입은 긍정적이나 역할이 과도하다'는 답변은 27명(7.6%)으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시민평가단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민평가단을 신뢰할 수 없어 부정적'이란 의견은 21.8%(77명)에 그쳤다. 결국 시민평가단의 도입 여부가 관건이 아니라,

시민평가단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역할과 한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제도화·실질화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Q. 최종 후보 2인 압축하는 시민평가단의 역할?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다



방송 민주화의 핵심 장치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상암동 MBC 신사옥에서 전국·서울 민주방송실천위원회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특히 전국 지역사의 민실위 간사 18명뿐만 아니라 서울의 민실위원 11명도 참여하며 논의와 교류의 폭을 넓혔다. 전국·서울 민실위 대회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선 각각 전국의 민실위 간사와 서울의 민실위원이 모여 토론했다.

먼저 전국 민실위 간사는 방송·보도에서 재난과 참사를 다룰 때 희생자와 유족을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언론의 가치 또한 지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최근 취재·제작 현장에서 무리한 유족 취재가 강요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험이 적은 저연차 기자나 제작진일수록 어디까지 설득하다 물러나야 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많은 언론사가 무리한 유족 취재를 지양하다 보니 마음이 진정된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도 들어줄 언론이 없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민실위 간사들은 이에 따라 유족이 취재를 거부해 물러날 때도 나중에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소속과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유족의 목소리만이 전달할 수 있는 사건의 본질이 있으므로 유족을 위한다며 외면하지 말고, ‘유족 취재가 왜 필요한지’ ‘유족을 존중하며 어떻게 접근할지’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추진해 보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서울 편제·보도 민실위원은 향후 민실위 활동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했다. 이날 민실위원들은 민실위가 어떤 조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이가 사내에 여전히 많으며, 먼저 민실위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사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결과의 공정만큼 이제는 절차의 공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보도·제작 절차가 민주적으로 이뤄지는지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시사 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이 개정됐지만, 권위주의적 문화나 온정주의적 관점 때문에 절차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쉽지 않으며, 공정방송의 명분과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민주적 절차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서 편제 민실위원과 보도 민실위원이 모인 만큼 부문 간 협의 창구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과 서울 민실위 조직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다.

2부에선 전국의 편제 민실위 간사와 서울 편제 민실위원의 합동 토론, 전국 보도 민실위 간사의 분임 토론, 서울 보도 민실위원의 분임 토론이 각각 열렸다.

전국 보도 민실위 간사 분임 토론은 <공동 취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보도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국 민실위 간사들은 중지를 모아 서울 뉴스로 네트워크 팀장에게 짧은 간담회를 요청했고, 네트워크 팀장·데스크가 이에 응답하며 40분이 넘는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올해의 방송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등을 휩쓴 <선거비 미반환 정치인 추적> 보도처럼 올해도 서울과 지역의 공동 기획 보도를 이어가자는 뜻을 모았다. 또한 향후 지역에서 발생하거나 발굴한 사안을 어떻게 전국적인 보도로 확장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 보기로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동 취재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 지역사 보도국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는 것을 꼽았다. 공통적인 사안이라도 각사의 인력 상황과 입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협력해 보도할 부분과 각자 보도할 부분의 가르마를 타려면 양보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빠른 결정을 위해 보도 책임자나 데스크뿐만 아니라 현장 기자끼리도 신뢰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약 2주 정도 <공동 취재 캠프>를 꾸려 아이템 회의, 취재 분업, 제작·편집, 보도까지 프로젝트 성으로 추진해 보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됐다. 다만 각 사마다 매일 로컬 뉴스 제작을 위해 필수 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공동 취재를 진행할 때 이를 로컬 뉴스에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일지는 차후 논의 과제로 남았다.

서울 민실위원들은 MBC가 당하는 언론탄압에 대응하는 자사 보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했다. 자사에 대한 허위사실 등 악의적 비방에 침묵하는 것은 사실을 추구해야 하는 언론의 책임을 오히려 방기하는 것이라면서도, 자사 입장 보도와 허위사실 팩트 체크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뉴스데스크에 나가는 자사 홍보성 기사라면 리포트나 단신 등 형식과 상관없이 뉴스 가치를 더욱 엄밀히 따져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국·서울 편제 분임 토론에서는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프로그램상을 지난 1년간 운영하며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문이나 팀에 따라 추천 후보작 수가 상이하게 다른 점을 고려해 후보작 추천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민실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차후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프로그램 상 운영 내규를 더욱 현실화할 계획이다.

